

거리두기 강화 대신 일주일 특별방역

오늘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특별방역관리 주간' 지정 일일 1회 이상 현장점검...경찰, 유흥시설 집중단속

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마지막 일주일일 '특별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하고 수도권과 경남권 중심으로 일일 1회 현장 점검 등 다중이용시설 집중 점검에 나선다. 방역수칙 위반이 잦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선 집중 단속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특별방역관리주간 운영계획'을 보고받았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직 의료체계 여력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확산 위험이 있어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운영시간 제한·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전 1주간(4월26일~5월2일)을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지정하여 증가세 반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12일부터 다음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유지하되 거리 두기와 관계 없이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난 3주간 국내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는 없으나 매주 30~4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은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산 등 경남권의 확진자

도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유행 상황을 평가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579.3명→621.1명→659.1명 등이다. 이 기간 수도권은 375.4명→419.1명→421.6명, 경남권은 78.4명→93.6명→114.4명 등이다.

4월 한달간 유행 양상을 보면 가족 지인 등 확진자 접촉(38.8%), 집단 발생(28.2%), 해외 유입(3.6%), 병원·요양원(1.8%) 순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집단감염은 다중이용시설 내 감염이 50% 내외로 계속 증가 중이다. 특히 감염 위험도가 높아 운영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음식점·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파티룸,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내 감염 비중이 3차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던 1월4일~17일 13.6%에서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2주간 67.1%로 크게 늘었다.

이동량은 지난 주말인 17~18일 681만건으로 3차 유행 직전의 11월 중순(지난해 11월14~15일) 7403만건에 근접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핵심 지표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일부터 14일째 600명대(25일 0시 기준 652.7명)로 이미 2.5단계(400~500명) 수준을 초과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거리 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영향 등으로 닷새만에 700명 아래로 감소한 25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출퇴근 대기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644명 증가한 11만8887명이다.

기 등 방역조치 강화 없이 확진자 발생 양상을 감소세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부터 5월2일까지 특별 방역관리주간 중앙부처는 방역조치 이행력을 강화한다. 장관책임제에 따라 부처별 특별 방역관리주간 동안 일 1회 이상 소관 시설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실장급 이상 참여)하고 관련 협회·단체 면담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

부처별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수도권·경남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제재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한다.

공공부문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해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회식·모임을 금지하며 방역수칙 위반 여부도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수도권·경남권은 현재 상황을 점검해 광역자치단체장이 특별방역대책을 마련·발표하고 1주간 시행할 계획이다. 광역단체장이 주재하고 기초단체장이 참석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는 매일 개최하고 일일점검을 한다.

집중관리 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

지자체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행사 및 대면회의,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서선욱기자

여수소방, 봄철 산악사고 긴급구조대책 추진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봄철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악사고를 막고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봄철 산악사고 긴급구조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산악사고는 4월 13.2%(160건), 9월 11.7%(141건), 5월 10.2%(123건) 순으로 봄과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며, 사고 원인으로는 조난 23.3%(282건), 실족·추락 15.4%(186건), 개인질환 9.8%(118건)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영취산 흥국사 입구에 혈압·혈당 체크 등 간이 응급의료를 운영하고, 산악사고 예방순찰 및 산불예방 홍보 등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금요산 등 12개 소규모 산악에 응급약품을 보충하고, 영취산 등 주요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피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점검·관리하며, 낙석 및 고립사고 대비 구조훈련과 비대면 산악사고 교육훈련 등을 추진한다.

여수=오상호 기자

담양소방, 불법행위 근절 '생명의문비상구, 신고해주세요'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인 되는 불법 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 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소화전 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담양소방서는 이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때는 1회 5만원(온누리 상품권 포함),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동부소방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폐기하세요"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외부 용기가 부식되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도 즉시 교체·폐기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폐기는 노후 소화기는 행정복지센터에 소화기 3.3kg 1개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 받아 소화기에 부착해 쓰레기 수거장에 배출하면 된다.

최윤희기자

영암소방, 노후공장 안전관리지원센터 운영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노후 공장시설의 자체 소방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노후 공장 안전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암소방서는 대불산업단지 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후공장(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이 작동 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자체 선정된 179개 노후 공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직접 지원한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전기 화재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대여하여 선로 내 과부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후 이를 관계인에게 통보 및 컨설팅하고, 공장 관계인 요청 시 적발을 위한 점검(중대 위반사항 제외)이 아닌 화재 안전정보조사를 추진, 소방서 조사반에 의한 소방시설 점검을 지원한다.

영암=조대호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사기 혐의 검찰송치



암호화폐인 BXA를 상장한다고 홍보하고 실제로 상장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투자자들 "BXA토큰 상장 이행 안해"

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이 전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이 전 의장과 김모 BK그룹 회장은 빗썸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빗썸 거래소를 압수해 해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이 전 의장 등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